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2월 24일 (목)

CONTENTS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IB 2020-16)

CONTENTS

- I.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
- II.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14
- III.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 24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2월 24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12월 4째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일전문인력 양성, 영화업계 지원방안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ESG가 기업경영, 국제무역 등에서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됨에 따라 통일전문인력도 이에 맞게 개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상해봤습니다. 제3편에서는 코로나 19로 존폐위기를 맞은 영화업계의 피해현황을 진단하고, 업계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1편: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내수 산업 육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제조업 중심 수출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SG는 경제뿐 아니라 전 사회분야에 걸쳐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개념이라 새로운 차원의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각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편이 필요함

제2편: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 요구는 물론,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 한편, 한반도 통일이란 민족적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현 한반도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대비, 구체적으로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긴요.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연구 및 학술회의를 개최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도 우리의 숙원인 통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여야 합의의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제3편: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조희문 前 인하대 교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 각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영화업계의 타격이 심각. 영화계는 제작 중단, 개봉 연기, 극장 운영 저조 등으로 업계 조성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특히, 영화 관객수가 지난해 대비 30% 수준으로 격감한 점은 이번 영화산업 위기의 주요원인이 유통 경색이라는 점을 방증. 그럼에도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스스로 생존하라는 식으로 영화업계를 사실상 방치. 이에 다른 위기산업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특히 영화인, 극장업계 등에 긴급지원 자금 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

I.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작성: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kek@cfe.org)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내수 산업 육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제조업 중심 수출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SG는 경제뿐 아니라 전 사회분야에 걸쳐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개념이라 새로운 차원의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각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편이 필요함

1. ESG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 유평하는 미국의 친환경정책

-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선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기후, 친환경 현안이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규칙으로 등장할 전망
 - 환경 규제를 철폐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경우 샌더스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음
-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추구

- 바이든 정부는 ‘건전한 자본’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친환경 정책에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의 핵심공약인 ‘클린에너지 경제건설’은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Net Zero가 핵심
-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4년간 2조 달러(2400조원) 이상 투자해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

〈표 1-1〉 조 바이든의 주요 친환경 공약

구분	주요 내용
2050 Net Zero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법령 제정 ■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10년간 총 4,000억 달러 투자 ■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인센티브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 변경, 주별 친환경 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기후변화 국가대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도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등
환경양극화 (Climate Gap)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관련 행사 집행 강화를 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등 ■ 친환경 혁신 정책 수혜를 오염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 배분

□ EU, 빨라지는 탄소중립 시간표

- EU는 2021년 상반기 중 ‘유럽 그린딜(Green Deal) 법안’을 마련할 전망
 - EU는 그린딜을 중심으로 8대 정책분야를 선정하여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
 - 2019년 12월 취임한 EU집행위원장(폰 데어 레이언)은 취임 전부터 기후 변화대응을 우선순위로 강조해왔으며 EU 그린딜 도입의 주역
- EU는 1조 유로 규모의 투자를 통해 그린딜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할 예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해양, 육상, 건축 분야로 확대, 역내 수입품에 탄소 국경 조정세(Carbon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정
 - 자동차 배출규제를 상향하고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를 강화

〈표 1-2〉 EU, 주요 환경 관련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온실가스 목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40%→55%) (유럽 기후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개정을 통해 도로 수송, 건물 부문도 대상에 포함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대상 무상할당 배출권 삭감(약 -24%)
탄소국경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20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간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EU 재생에너지 금융 메커니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공여국 투자를 자국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으로 인정 등

□ 중국, 친환경 정책으로 경쟁력·리더십 두 마리 토끼 전략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도 불구하고 협약 준수 및 녹색회복을 주장하는 등 환경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UN총회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을 보유하여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임
 - 전세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30%가 중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 수준임
 - 2019년 중국내 전기차 판매량 120만대로 전세계 판매량의 52.6%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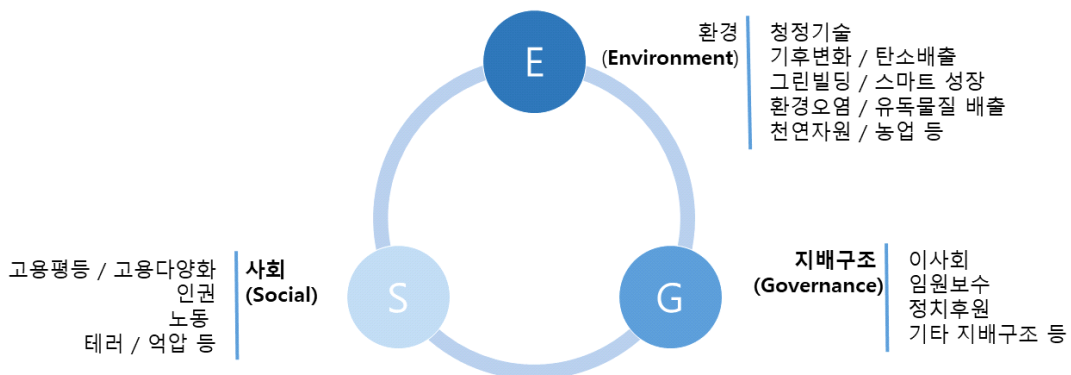
〈표 1-3〉 중국의 주요 친환경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육성 정책으로 ‘중국 제조 2025’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 분야로 선정 → 비화석발전 비중 2035년 78%, 2050년 91%로 확대 전망 (태양광/풍력: 2035년 58%, 2050년 73%)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충전보장능력 행동계획(2018)으로 2019년 전기차 충전 스탠드 큰 폭 증가 (2017년 44만개 → 2019년 122만개)
Great Green W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bon Offsets 일환으로 2050년까지 35백만 헥타르 산림 및 습지 조성
녹색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목표 이행 메커니즘으로 활용 확대 전망

2.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ESG

- 친환경 공약을 앞세운 바이든의 당선과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ESG는 경제계에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
-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될 전망
-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경제적 암흑기에도 성장,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해답으로 지목된 것이 ESG 지표들임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글로벌 불경기 상황에서도 투자수익을 창출이 가능하려면 환경문제(E)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적 기여(S)에 충실하며 지배구조(G)가 건전한 기업에 투자, 즉 ESG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 ESG 경영은 단순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속경영의 필수 조건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추세임

[그림 1-1] ESG 구성 요소



* 자료: 메리츠 증권

- ESG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 외에도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 변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ESG 확산은 민간이 주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 RE100 캠페인¹⁾이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시민단체들의 환경 캠페인으로 시작한 구호가 이제 WTO 이상의 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Bottom-up 형식의 전개과정은 제레미 하이먼즈가²⁾ 제시한 ‘새로운 권력’이 성공적으로 발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음

3. 기업의 생존조건으로 등장한 ESG

- 기업의 경영 및 투자 측면에서 ESG 리스크를 고려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2019년 주주들의 탄소감축 요구를 묵살했던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경우 80달러 대의 주가가 절반 이하로 폭락, 2020년 8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92년 만에 퇴출됨
- 2020년 9월 개봉한 디즈니 영화 ‘물란’은 엔딩크레딧에 신장 위구르의

1)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얻겠다는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캠페인. 2014년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개최한 뉴욕기후주간에서 발족됨

2)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제레미 하이먼즈, 비즈니스북스, 2019.

중국 공안에게 촬영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가 강력한 불매운동에 직면한 바 있음

- (주)한화는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분산탄)를 제조한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럽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해 결국 2020년 11월 분산탄 사업 분야를 전격 매각하기에 이룸
- 반면, 덴마크의 오스테드는 석유사업에서 친환경 해상풍력 발전회사로 거듭 나면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였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각국 정부의 ESG 관련 규제/정책 및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 요구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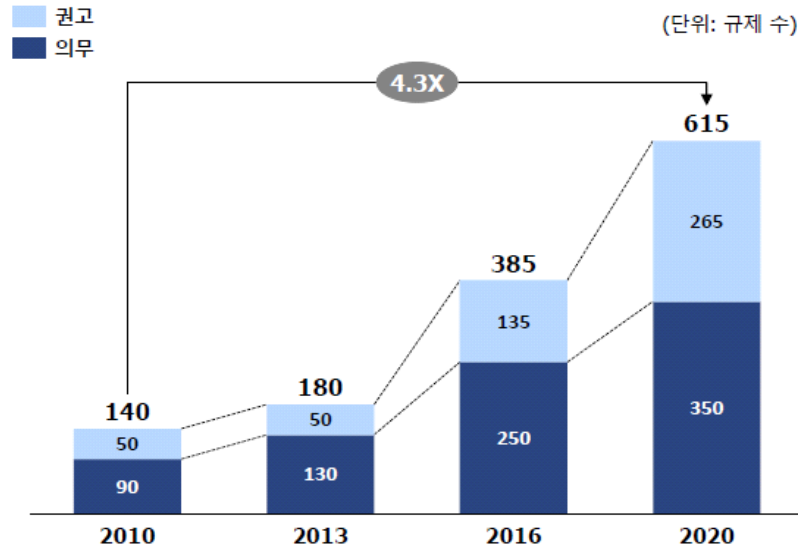
- ESG 관련 각국의 신규규제 및 정책은 최근 6년간 6.5배 증가
- ESG 정보공시 규제 또한 지난 10년간 4배 증가함

〈표 1-4〉 ESG 관련 각국의 신규 규제/정책 도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금융 Action Plan 제정 ■ 주주권리보호 규제 도입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 도입 등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선임시 다양성 고려 권고 ■ 남녀 임금 격차 공시 의무화
중국/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채권 발행 및 검증 가이드라인 도입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리스크 관리/실사/공시 의무화

* 자료: MSCI, Who will Regulate ESG?(2020)

[그림 1-2] 정보공시 증가 추이



* 자료: GRI, Carrots and Sticks 2020: 증권거래소, 금융규제기관 등 정부관련 기관 제정 규제

4. 국내 기업의 ESG 경영과 현안

- 환경(E) 분야의 탄소 배출량,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 등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미국의 탄소조정세³⁾, EU의 탄소국경조정세⁴⁾는 환경 기준을 넘지 못하는 기업에 관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임
- 저탄소 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국내 기업의 강점인 원가경쟁력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고탄소 집약적인 국내 주력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함

3) 바이든 2050 탄소제로 공약: 미국이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 관련 상품에 대해 관세 부과

4) EU 탄소국경조정세: 2023년 도입을 추진 중인 새로운 관세 형태임. 자국 수출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다른 나라 수입기업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내용이 골자임

-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상황임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의미함⁵⁾
 - 2018년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수출기업에도 납품하는 부품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음
 - BMW는 LG화학과 삼성SDI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기차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조건을 맞추지 못한 LG화학은 결국 BMW 납품하지 못했으며, 애플도 SK하이닉스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자사 납품 제품을 사용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함
- 국내 기업들도 환경 이슈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ESG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존에 유리하다는 판단하고 있음
 - SK의 RE100 선언은 그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임
 - SK는 SK,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 8개 계열사가 국내 최초로 RE100위원회에 가입했으며, 수소사업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액화수소 설비를 구축, 공급하는 사업에 뛰어 들었음
 - 삼성그룹도 탈석탄 방침을 확고히 하고,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신규 참여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은 순차적 철수 방침임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금융 계열사 역시

5) 2020년 12월 현재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함

석탄발전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 건설 목적의 회사채 등 직간접적인 투자를 모두 중단하고, 석탄 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함

- 한화그룹은 태양광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약·방산 산업을 분할해 별도 독립법인으로 만들고 브랜드가치 제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피할 예정임
- 그 외 DB손해보험, KB금융지주 등 금융권도 '탈석탄 금융'을 추구하며 석탄관련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추세임

○ 한편 국내에서는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책임투자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배구조(G) 분야에 관심이 높음

-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큼
-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신속한 의사결정, 적절한 투자, 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 한편, 가족기업이 ESG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 안목에서 가치경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주목을 받고 있음⁶⁾
 - ESG 경영은 단기적 경영성과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성립 가능함
 - 단기적으로는 매출, 수익 구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ESG에 충실한 방식으로 기업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안정된 수입구조가 필수적임

6)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2020년 11월 18일 열린 '징벌적 기업 상속세, 타당한가'를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내 3367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주도하면서 친환경 분야 역량을 강화해 비재무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함

- ESG 경영은 보편적, 규범적 적용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경영 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게 제도와 규제를 통해 ESG 경영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 주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 기업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⁷⁾

5.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ESG 중심의 무역 기조는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선진국들은 ‘환경 정의’라는 명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술적·제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산업 보호’라는 실익도 얻는 상황임
- 반면, ESG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친환경 무역 기조가 또 하나의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7) 민재형, 김범석, “기업의 ESG 노력은 지속가능경영의 당위적 명제인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비재무적 책임향상 노력의 차별적 효과”, <경영과학> 제36권 제 1호, 2019년 3월, pp.17-35.

- 미국, 중국, EU 등 무역상대국의 ESG 정책들을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피해가 심각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 환경공시 의무화, 녹색투자 의무화, 탄소배출권 거래 기준 강화와 같은 환경규제의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 차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과 목표, 자원 마련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치 이슈에 함몰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들의 RE100 선언에 따른 구체적 실천이 가능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에너지 시장 체계를 개편해야 함
 - 2019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전 25.9%, △LNG 23.3%, △신재생 6.5% 수준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낮음
 -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비중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미국, 영국, 일본도 탄소중립, 낮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고려해 원전 활용을 높이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
 - 국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환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며 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비해 가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